

그러나 민생단 사건이 발생하고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만주에서의 활동은 점차 어려워졌다. 지청천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요청으로 독립군을 이끌고 만주를 떠나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다.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이 일제에 살해당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수많은 독립군이 중국 본토로 이동한 후에도 만주 지역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계속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중심으로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였다. 만주의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동북 인민 혁명군의 일원이 되어 항일 전쟁에 참여하였다. 동북 인민 혁명군은 항일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이름을 동북 항일 연군으로 고치고, 일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단결을 추구하였다.

동북 항일 연군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활동하였다. 한인 간부들은 이념과 민족을 초월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였다. 조국 광복회는 국내의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함경도 일대에도 조직을 확대하고, 보천보 전투 등 국내 진공 작전을 여러 차례 단행하였다. 일제의 공세가 강화되자 이들은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곳에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소련군의 일원으로 항일 운동을 지속하였다.

#### 민생단 사건

1930년대 초반 간도에서 활동하던 500여 명의 조선인 항일 혁명가들이 일본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살해된 사건



▲ 양세봉

#### 민족 연합 전선을 추진하다

1930년대에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대일 항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민족 연합 전선을 추진하였다. 김원봉 등은 먼저 단일 정당으로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였다.



▲ 동북 항일 연군 장병들

#### 역사의 창 | 보천보를 습격하다

1937년 6월 동북 항일 연군 내의 한인 부대원들은 백두산 지구 유격구를 건설하고 '조국 광복회' 조직을 국내에 넓히기 위하여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 보천보 지역을 습격하였다. 이들은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 소방서 등 일제의 행정 관청을 공격하였으며, 철수하던 중에도 추격하던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당시 국내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이 작전을 성공시킨 김일성의 이름도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사건에 놀란 일제는 조국 광복회의 국내 조직 색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만주 지역 유격대에 대한 공세도 크게 강화하였다.



●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다** 광복 당시 전체 경작 면적의 60% 이상이 소작지였고, 소작농은 자소작농을 합하여 83% 정도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건국 강령에서 모든 토지는 경작자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미 군정은 초기에는 토지 개혁에 미온적이었으나, 소작료를 총 수확물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 지가 증권

그러나 농민들은 자신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북한에서 1946년 3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자,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 군정은 토지 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입법을 서둘렀으나, 지주층의 반발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미 군정청은 결국 1948년 총선거를 앞두고 신한 공사를 해체하고 귀속 농지 분배를 실시하였다.



⊙ 농지 개혁법 해설서

정부가 수립되자 토지 개혁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었고, 1949년 농지 개혁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농지 개혁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호당 분배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3정보(약 30,000m<sup>2</sup>)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지주들에게는 지가 증권을 주었으며, 농민은 연간 소출량의 150%를 5년간 정부에 분할 상환하였다.

농지 개혁은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전쟁 전까지 70~80%가 농민에게 분배될 정도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고, 전쟁이 끝난 후 재개되었다.

농지 개혁 후 일부 농민은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팔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으로 농민은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으로 전환하였고, 전근대적인 지주제는 사라졌다. 농민들의 생산 의욕도 높아져 농업 생산이 늘게 되었으며,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역사의 창 | 북한의 토지 개혁



왼쪽 포스터는 북한이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내걸었던 것이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 개혁법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38선 북측 지역에 자신들의 안정된 정권과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 및 일본인, 친일파,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분배한 결과, 이후 농가는 평균 약 16,137m<sup>2</sup> 정도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 농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수확량의 30%를 현물세로 내었다.



## 농지 개혁

광복 당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친일파 청산 이외에도 토지 개혁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나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1946년에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남한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 6월에 농지 개혁법이 공포되고, 1950년 3월에는 농지 개혁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농지 개혁은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시작되어 1957년에 종결되었다. 농지 개혁의 방식은 **3정보를 상한으로 하여 정부가 지주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 돈을 받고 나누어주는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농민은 분배받은 토지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1년 평균 생산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5년에 걸쳐 매년 정부에 나누어 지불함으로써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농지 개혁의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으며,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벗어나 자기 농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분배받은 토지의 가격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갚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주들도 대부분 땅값으로 받은 지가 증권을 6·25 전쟁 동안 헐값으로 팔아 생계 비용에 충당함으로써 몰락하여 근대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 데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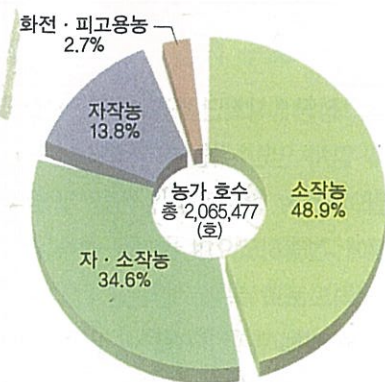
### 농지 개혁법

1950년 3월 10일에 개정법이 공포되고, 3월 25일에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4월 28일에 시행 규칙이 공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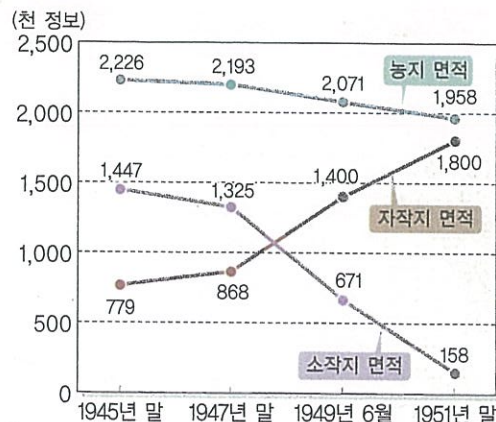


▲ 지가 증권 농지 개혁 때 정부에서 매수한 토지의 보상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하였다. 정부는 지주들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기에 용이하도록 현금으로 보상하려는 의도에서 지가 증권을 발급하였다.

## 농지 개혁 전후 농가 호수와 소작지 변화



▲ 소유 형태별 농가 호수의 분포(1945년 말)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농지 개혁사 연구", 1989 -

▲ 농지 개혁 전후 소작지 변화

1951년 현재 소작지의 89.1%가 자작지로 바뀌었는데, 미 군정청의 귀속 농지 유상 분배에 의한 것이 18.9%였고, 지주의 임의 처분에 의한 것이 49.2%였으며, 농지 개혁의 실시로 인한 비율은 21%였다.



## 2 북한의 정부 수립



▲ 북한의 토지 개혁 선전물

### 북한의 사회주의화

8·15 광복 직후 북한에서도 건국 준비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평안남도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각지에서 자생적인 정치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각 지역의 건국 준비 조직들은 도 단위의 인민 위원회로 통합되었

다. 뒤이어 시, 군, 면의 지방 인민 위원회도 1945년 11월까지 조직을 완료하였고, 이듬해 2월에는 중앙 행정 기관인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소련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립하고, 당 책임 비서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당권을 장악한 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김일성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던 우익 지도자 조만식을 숙청하였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친일파를 숙청하였으며,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8시간 노동제를 규정한 노동법과 남녀평등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 5정보를 상한으로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대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후 김일성은 중국 옌안으로부터 돌아온 김두봉의 조선新民당과 통합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세웠으며, 북한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에는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과 통합하여 조선 노동당을 세워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 북조선 노동당

1946년 8월에 결성되어 위원장에 김두봉, 부위원장에 김일성, 허가이가 선출되었다.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1946. 2.)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및 5도 행정국 인민 위원회 대표 협의회가 개최되어 임시 인민 위원회 수립을 결정하였다. 임시 인민 위원회는 북한 정권의 최초 형태로 김일성을 위원장, 김두봉을 부위원장, 강양욱을 서기장에 선출하였으며, 북한 전 지역의 행정적·경제적 편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북한 지역 전체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남북이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분할 점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단독으로 임시 인민 위원회라는 중앙 행정 조직을 결성한 것은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민족적 염원과 배치되는 것이었다.